

광주·전남 4대 거점 '메가 경제권' … '60분 생활권' 시대 연다

국회서 통합 특별법안 공청회

안도걸 의원 '미래·공간 구상' 발표
증부, AI융합·혁신·서부, 그린에너지
"시·군·구 행정체계 조율 특례 필요"
"재정분권, 지방조세부담 증가 우려"

오는 7월 출범을 목표로 하는 '(가칭)광주전남 특별시'가 지역을 4개 거점 경제권으로 나눠 첨단 산업 벨트로 촘촘히 엮어내는 협력형 육성 전략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거점별 산업·교통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시도민이 어디서든 1시간 이내에 이동 가능한 '60분 광역 생활권'도 구축된다. 수도권에 버금가는 초광역 메가시티를 실현하겠다는 청사진이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통합추진 특별위원회와 광주시, 전남도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발제에 나선 안도걸 국회의원은 '중부권 경제권'은 광주시와 나주, 화순, 장성, 담양, 함평, 영광을 아우르는 'AI 융합혁신경제축'으로 육성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여수와 순천, 광양을 중심으로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장흥이 포함된 '동부권 경제권'은 '첨단소재 우주경제축'으로 거듭난다. 기존의 석유화학 및 철강 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자전지와 우주항공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서부권 경제권'은 목포와 무안, 영암, 해남, 신안, 진도, 완도, 강진을 묶어 '그린에너지 경제축'으로 조성한다. 풍부한 해상 자원을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산업과 AI 거대 인프라, 첨단 해양 산업이 핵심이다.

남해안 일대는 '남부권 경제권'으로 분류해 '남해안 웰니스경제축'을 구축한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해 체류형 고급 해양 관광과 스포츠·생태·산림 휴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관광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광주·전남 4대 거점은 '미래성장 전략산업 벨트'를 통해 하나로 연결된다. 광주와 장성, 영광 등을 잇는 '모빌리티·반도체 벨트'와 서남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신재생에너지 벨트', 화순과 나주 등을 연결하는 '첨단 바이오헬스 벨트', 고흥과 순천을 잇는 '우주항공 벨트' 등이 대표적이다.

각 벨트 내부에는 특화 신도시와 클러스터가 들어선다. 광주 인근에는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와 'AX 실증밸리'가, 해남 솔라시도에는 '에너지 해양 미래도시'가 조성될 예정이다.

무안에는 '무안국제공항도시', 고흥에는 '우주항공 산업도시'를 구축해 산업과 주거가 어우러진 혁신 거점을 만든다는 복안이다.

이 모든 거점과 벨트를 유기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핵심은 '광역 교통망'이다. 통합 도시는 공항(무안), 항만(광양·목포), 철도(KTX)를 잇는 'Tri-port' 시스템을 완성해 글로벌 관문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광역 도로와 철도 건설비의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하는 특례를 통해 광주·전남 전역을 60분 생활권으로 묶는다는 계획이다.

안 의원은 "교통망 확충은 단순한 이동 편의를 넘어 산업적 시너지를 내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지역이 주도적으로 교통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보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핵심 인프라를 조기에 완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광주시와 전남도 통합에 따른 현실적인 고지와 후속 대책에 대한 전문가 제언이 쏟아졌다. 정부 예산의 지속적인 지원과 통합 특별시 내 기초자치체(시군구)의 상이한 행정 체계를 조율하기 위한 특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종합토론에서 이원희 전 한국행정학회장은 "정책적으로 오랫동안 논의되었던 문제가 채택되는 시점을 '정책의 왕이 열린다'고 하는데 지금이 바로 그 때"라며 광주·전남 통합 속도에 힘을 실었다. 다만 그는 "재정 분권이 어려져야 하지만 이에 따른 지방 조세 부담 증가 우려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리적인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우려도 제기됐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 연구관은 "통합 이후에도 예산 지원이 지속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면서 "특별법 제정과 실제 시행 시기가 불과 4~5개월 차이라면 굉장히 서둘러야 한다. 각종 자치법규 정비와 주소지 변경, 정보 시스템 구축 등 행정 전반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하므로 체계적이고 빠른 준비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정병호 기자 jush@kwangju.co.kr



김여송 광주일보 회장, 한국신문협회 신년 발행인 세미나 참석

김여송 광주일보 회장(한국신문협회 부회장·상단 테이블 왼쪽에서 세번째)은 15일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2026년 신년 발행인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조성준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가 '빅데이터 기반의 미래트렌드 및 미

디어 기업의 활용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신문의 미래 경쟁력은 기사량이 아니라 독자 데이터를 얼마나 잘 이해해 의사결정에 쓰는 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신문협회는 전국의 일간신문 및 뉴스통신사 가운데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52개 일반

일간지와 2개 통신사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앙 일간지가 27개사이며 지방 일간지 27개사가 포함됐다. 광주·전남에서는 광주일보가 유일한 회원사다.

/글=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사진=부산일보 김종진기자

전국 시도 교육감들 "행정통합 논의서 교육공동체 목소리 소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입장문

교육감 직선제 원칙 등 촉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는 15일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논의 과정에서 교육 정책을 책임지는 교육 정과 교육 공동체의 목소리는 소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방행정체제 통합이라는 행정 효율성에 매몰돼 교육 자치의 본질이 외면받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통합 논의의 모든 과정에서 교육 자

치의 기본 원리인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염중히 보장돼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도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의 공공성을 최우선에 두고 교육 자치의 독립적 위상을 명확히 명문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 통합 논의와 정부 및 국회 자원의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교육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며 "교育 공동체의 공식적이고 실질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협의회는 "최근 거론되는 협행 직선제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한 변경과 지자체장에 의한 교육 분야 감사권 강화 등의 시도는 교육 자치의 뿌리를 흔드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강은희 협의회 회장과 김지철 충남 교육감은 전날 국회를 방문해 한전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교육 자치의 독립성 보장, 교육감 직선제 원칙 유지, 교육 재정의 자주성과 감사의 독립성 확보, 행정 통합 과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경과 규정 마련 등을 요구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일보 74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김영록 지사, 행정통합 특별법 신속 제정 건의

한병도 원내대표, 당 차원 지원 약속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를 만나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건의했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한병도 원내대표를 만나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가칭) 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한 원내대표에게 특별법에 명시된 에너지 산업과 전남의 첨단전략 산업을 비롯한 지역의 핵심 성장동력 육성과 능선어촌 특례, 청년과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짚어 가며 국회 차원의 신속한 법률 제정을 요청했다.

한 원내대표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깊이 공감한다. 2월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상임임원(이사·감사)모집공고

당 조합은 산용협동조합 임원선거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상임임원(이사·감사)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상임이사 1명, 상임감사 1명/임기 각 4년

자격요건

1. 신용협동조합 제27조(임원) 및 제28조(임원의 자격제한), 정관 제45조(상임임원의 자격)에 따른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
가. 조합 다른조합 포함 또는 중앙회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금융관련 국가기관,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또는 같은법 제38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에서 금융관련 업무에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상임 감사의 경우) 임원선거일 현재 3년 이내에 조합의 임직원 (상임감사자는 제외)이 아니었던 사람
2. 신협법 제28조(임원등의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3. 조합 정관 제54조(임원자격의 제한) 및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칙 제8조(선택기권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제출시류

1. 자기소개서 1부(당 조합 소정양식)
2. 자기소개서 1부(44쪽이상 3매이내)
3. 최종학력증명서(대학원인 경우 대학포함),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4.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1부(과거주소이력포함)
5.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개인정보용정보회사(당 조합 소정양식)

제출기간 및 방법

1. 제출기간 : 2026. 01. 16. ~ 2026. 01. 21.(15시까지)
2. 제출처 : 순천중앙신용협동조합 기획실(순천시 중앙시장길 61)
3. 제출방법 : 본인 직접 방문접수

전형방법 및 합격자 발표

1차 : 서류심사
2차 : 이사회 후보자 결정 (소견발표 및 면접)
3차 : 정기총회 의결 후 최종 임용

기타사항

제출서류는 일제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순천중앙신용협동조합(061-759-6673)

2026. 01. 16.

순천중앙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직인생략]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 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합병 공고

주식회사 자율(갑)은 2026년 1월 15일 주주총회 결의로 삼동건설 주식회사(을)는 동년 1월 15일 주주총회 결의로 주식회사 자율은 삼동건설 주식회사를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삼동건설 주식회사는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제권자는 본 공고제게일 이일부터 1개월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고 각 회사의 해당주주께서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16일

주식회사 자율

전남도 남광군 고서면 가문사로 324-5
대표이사 심재문

삼동건설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북구 연암로20번길 14-6(연제동)

대표이사 심재문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1차)

본 회사는 2026년 1월 09일 주주총회 결의에서 해산을 결의하였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신 분은 본 공고 게재일 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6일

주식회사 제이케이하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동길 63번길 31, 102동 5층 502호(지죽동, 광산엘리제 레이크시티오피스텔)
청산인 장영욱

서 구

• 광·평 266-1920
• 문·홍 672-1960
• 북광주 525-3761
• 신·안 222-8171
• 양·산 571-7658
• 오·치 266-7601
• 용·봉 433-1503
• 우·산 433-1503

동 구